

자발적 외부감사와 조세순응*

문진주** · 홍기용***

〈요약〉

본 연구에서는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자발적 외부감사가 조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보상 여부와 혜택(세액공제, 세무조사 제외 등)이 주어질 때 조세순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실험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험참여자는 세무신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4년제 대학의 회계 전공자 중에서 세무회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세무신고 의사결정)을 측정하는 신고소득률이며, 독립변수는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 및 혜택 유형(세무조사 면제, 세액공제)으로 집단 간 설계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예비 실험 2회, 실전 실험 6회의 세무신고를 수행하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와 세무신고 행태를 분석하여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혜택 제공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신고소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발적 외부감사의 실시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순응을 유도하는데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의 유형 중에서는 세무조사 면제 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이 신고소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순응 유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순응을 유인할 정책으로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 제공이 유의할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발적 외부감사는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세순응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도 순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감사, 조세순응, 회계, 조세, 세법

* 본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1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208rina@bufs.ac.kr, 주저자

***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hong@tax.kr, 교신저자

I. 서 론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경우 회계정보 이용자는 상장기업보다 그 수가 적고 단순 회계정보가 세무정보에 비해 중요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외부감사 여부는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이 회계정보의 질에 관한 영향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규모 법인일수록 회계정보 이외에 조세정보(법인세 등)의 비중이 높을 수 있어서, 회계정보 이용자 중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과세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자발적 외부감사가 조세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보상 여부와 혜택(세액공제, 세무조사 제외 등)이 주어질 때 조세순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Wallace(2004)는 외부감사의 수요자와 기능에 대하여 수탁책임(감독) 가설, 정보가설 그리고 보험가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차적인 외부감사의 정보이용자는 소유자, 경영자, 투자자 정도로 구분된다. 특히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 정보를 신뢰하여 자기자본비용과 타인 자본비용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선행연구들(Khurana and Raman 2004 ; Fernando et al. 2008 ; 오광욱 등 2011)은 외부감사의 효용을 분석한 결과이다. 하지만 납세자와 과세권자도 회계이익으로부터 산출되는 과세소득을 근거로 세금을 납부하고 징수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지만,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고 거래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해져 가는 것과 무관하게 과세권자는 신고된 과세소득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신해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과세권자는 행정력을 유연하게 증가시키기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위해서는 과세소득의 기초가 되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도 과세권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이 작성한 회계정보가 신뢰성 있음을 입증받고자 한다. 즉, 외부감사는 효율적인 조세 행정과 조세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인 수단으로써 연결되며,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자발적 외부감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자발적 외부감사의 증가는 기업투명성의 제고를 통한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것이다.

본 연구는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보상 여부와 혜택이 주어질 때 조세순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한다. 조세순응 관련 연구들은 규제 중심의 정책에 대한 보완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Feld, Frey and Torgler 2006). 특히 세무신고 행위에 있어 경제적 유인이 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의 제공이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Falkinger and Walter 1991). 실례로,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당국도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우대 해

택¹⁾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세당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혜택을 지속해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 정책은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일정부분의 경제적 지출이 수반되거나, 추가적인 행정 서비스 자원이 소모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기대한 바와 같이 보상 정책의 도입에 따른 납세자의 조세순응이 유발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재정의 유출과 행정인력의 낭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보상의 부여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유발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이 자발적 외부감사를 받으면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는 납세자의 세무신고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법인납세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정감사 대상이 아닌 법인의 소득탈루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측면이 있다.²⁾ 그러한 법인에 관한 보상 정책 마련 또는 관련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법인의 자발적 외부감사와 조세순응의 관계에 관하여 연구는 필요하다. 본 논문은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보상이 세무신고 행태에 미치는 순기능적 영향에 대해 검증함으로써, 외부감사를 유도하여 법인세 납세자에 대한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외부감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는 일반 주주뿐 아니라 잠재적 주주, 채권자, 종업원, 정부, 소비자 등 제반 이해관계자에게 정확한 재무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재무 보고되는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재무 보고에 오류가 있거나 회계 부정이 있다면 왜곡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기업과 외부감사인인 투자 철회, 불매운동 및 손해배상소송 피소 등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재무 보고 과정에서 외부감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외부감사는 기업의 경제적인 행동과 사건에 대하여 경영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

1) 모범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상 우대 혜택(세무조사 3년간 유예,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등)과 사회적 우대 혜택(철도운임 할인, 공항 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무역보험 우대 등)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국세청 홈페이지, 모범납세자제도 참고).

2) 2023년도 국세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법인사업자 906,325개 중 3,963개만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소득금액별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을 살펴보면 법정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10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4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³⁾

권재열(1998)은 이러한 외부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회계학회(AAA)의 ASOBAC(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의 내용을 인용하여 네 가지의 정보위험 때문에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이해관계인 집단 간에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들이 얻은 정보에 편의(bias)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정보이용자는 회계정보의 중요성(consequence)으로 인해 제공되는 정보의 질에 대하여 불편성(unbiasedness)을 요구하고, 그에 관한 결과로 제삼자에 의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거래유형으로 인해 회계정보의 복잡성(complexity)이 높아지고, 고의성 없는 오류(unintentional error)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문가의 비판적 검증을 위하여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회계환경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복잡하여 정보원과 이해관계인 간의 격리성(remoteness)이 존재하게 되고, 그로 인해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자가 직접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을 평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제삼자인 전문가의 확인으로 잘못된 의사결정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하여 Wallace(2004)는 외부감사의 수요자와 기능을 세 가지 가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외부감사의 수요자와 기능

가설	수요자	기능
수탁책임(감독) 가설	소유자, 경영자	경영자 관찰
정보가설	투자자, 경영자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보험가설	경영자	보험

주) 자료 : Wallace, 2004

첫째, 수탁책임(감독) 가설(the stewardship(monitoring) hypothesis)은 외부감사가 기업의 소유자(owner)와 대리인인 경영자(manager)의 정보가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y)한 문제에 대하여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으로 설명하고 있다. 외부감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기업 소유자와 경영자의 효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보가설(the information hypothesis)은 투자 및 자본조달 의사결정에 있어서 투자자(capital providers)와 경영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

3)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73, 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s, "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 p.2.

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외부감사가 수행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험가설(the insurance hypothesis)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에 있어서 외부감사가 보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는 재무 보고에 대해 ‘기업 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재무회계개념체계 제6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면 Wallace(2004)의 세 가지 가설 중 정보가설이 외부감사의 기능을 이론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수탁책임(감독) 가설에서 가정하고 있는 경영자와 소유자의 정보 불균형 문제는 투자자와 경영자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기업의 회계정보가 적절하게 보고되지 않으면 그 기업의 실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므로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감사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다.⁴⁾ 현재는 투자자가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운 투자자가 될 수 있으므로 미래의 투자자도 외부감사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도 간접적으로 감사의견을 대출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경우 외부감사의 수요자가 될 수 있으며, 과세권을 행사하는 정부도 감사의견이 반영된 회계정보를 이용하므로, 외부감사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즉, 외부감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활동하는 모든 경제활동 행위자들을 위한 용역(service)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박정우 등 2010).

2. 조세순응

조세순응(tax compliance)은 비합법적 행위를 통해 조세회피를 하지 않고 조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반하여 조세회피는 조세순응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Andreoni et al. 1998).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자원 동원 수단은 조세이다(Hettich and Winer 2002). 따라서 탈세가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은 납세자들의 조세순응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Allingham and Sandmo(1972)의 연구는 조세순응 행위에 관한 최초의 이론적 연구로서 납세자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경제학 분야에서 시행된 대부분의 납세 순응 행위에 관한 연구의 바탕이 되고 있다. Allingham and Sandmo(1972)이 제시한 모형에서는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가능성과 가산세율, 세율

4) 투자액이 적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계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는 외부감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등이 납세자의 세무신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납세자 개개인은 적발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납부세액을 결정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조세순응을 높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위주의 수단만으로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유도한다는 견해는 납세자의 조세순응 행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납세자들의 납세 순응 행위는 과세당국의 처벌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현진권과 박창균 2001).

이에 따라 처벌 이외의 차별적인 세무 정책으로서 성실한 납세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 이론적 연구에 등장하게 되었다. Falkinger and Walther(1991)의 연구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유인으로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Falkinger and Walther(1991)은 납세자에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고, 탈루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가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보상정책과 가산세율을 동시에 도입하거나 확대하면, 정부의 기대 세수율(tax yield)은 변동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의 최적 기대효용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납세자의 가치분소득(disposal income)은 보다 증가하는 반면, 정부는 동일한 세수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납세자 순응 행위는 기대효용이론으로 대표되는 순수경제학의 모형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면서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경제적 요인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납세자의 조세순응은 세무조사, 세율, 가산세, 세액공제 등의 보상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시민의식(Feld and Frey 2002), 조세 윤리(Alm and Torgler 2011), 조세제도 공정성(Wenzel 2003), 사회적 규범(Wenzel 2004)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 자발적 외부감사와 조세순응의 관계

자발적 외부감사와 조세순응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자발적 외부감사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재무회계 관점에서 감사의 의의를 분석하고 있다(황인태 2007 ; 박종일 등 2011 ; 장금주 등 2014). 자발적 외부감사와 조세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로는 자발적 감사와 조세회피를 다룬 최보람과 윤성만(2017)의 연구와 자발적 외부 회계감사 확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법인세 세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홍기용 등(2013)의 연구가 있다.

최보람과 윤성만(2017)은 2014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사기준이 완화되어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세회피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감사 대상이었던 기업이 감사기준 완화로 인해 임의감사로 전환된 경우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감사 특성이 추가적인 영향력이 있는지 확인한 분석에서도 대형회계법인(BIG 4) 감사인인 경우 조세회피에 유의한 양(+)의 결과를 확인하여

감사인 규모에 따라 조세회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홍기용 등(2013)은 자발적 외부 회계감로 인한 조세지원 허용(세액공제 등)에 따른 조세지출 효과와 법인세 수입 증가 효과를 2011년 국세 통계 연보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 외부감사를 위한 재정지원이 오히려 나중에 법인세 세수 증가의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회계감사와 같은 자발적 간접세무조사를 통해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외부감사의 효과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로 박정우 등(2010)의 연구가 있다. 박정우 등(2010)은 외부감사는 다양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성이 존재하므로 외부감사에 대한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균형 생산량이 사회적 생산량보다 적어지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상기업의 한계세율을 낮출 수 있는 조세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과세 관청이 재무제표의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외부감사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외부감사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의 성실성에 있어서 외부감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정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은 실질적으로 소규모 비상장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소규모기업일수록 회계와 법인세의 정보 방향성이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감사의 정보효과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감사효과는 회계정보의 질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발적 외부감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소규모기업의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과세 관청이라는 관점에서 회계감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개선하고, 세원 확보 및 조세 행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즉 소규모기업에 의한 자발적 외부감사를 높이기 위한 조세 등 각종 혜택은 후에 더 큰 사회적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실증연구에 주안을 두고 있다.

4. 가설설정

Wallace(2004)는 외부감사의 효과에 대하여 수탁책임(감독) 가설, 정보가설, 보험가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압력이 없으며, 이해관계자가 적고, 대리인 비용이 낮은 특징이 있어 외부감사의 효과는 정보가설의 관점에서 논의된다(장금주 외 2014). 다만, 재무회계 관점에서의 투자자에게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세무회계 관점에서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 자료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최보람과 윤성만 2017).

과세권자는 효율적인 조세 행정을 위하여 과세소득의 기초가 되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필요하며, 납세자도 과세권자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작성된 회계정보가 신뢰성 있음을 입증받고자 할 것이다. 최보람과 윤성만(2017)은 법정감사 대상이었던 기업이 감사기준의 완화로 인해 임의감사로 전환되면 조세회피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박정우 등(2010)은 국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재무제표의 품질 및 신뢰성 판단에 있어 과세관청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외부감사가 법인세의 성실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법정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면 외부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보다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세순응이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자발적 외부감사의 실시는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세순응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가 제시되었는데, 제재(세무조사, 가산세 등)에 기반을 둔 정책뿐 아니라 납세 순응 행위를 유도하는 보상(세무조사 면제,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연구도 제시되었다. 납세자들의 납세 순응 행위는 과세당국의 처벌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현진권과 박창균 2001). Falkinger and Walther(1991)의 연구에서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유인으로서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Alm et al.(1991)은 실험을 통해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세무조사 가능성 감소)의 제공이 납세 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보상의 수단이 조세순응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배수진(2017)의 연구에서도 성실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면제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조건별 보상이 조세순응 제고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부감사를 촉진하기 위한 보상 정책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 등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한 기업에 대한 보상(세액공제, 세무조사면제) 제공은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 정책이 포함된 가상의 세무신고 상황에서 실험참여자(납세자)들의 세무신고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실험방법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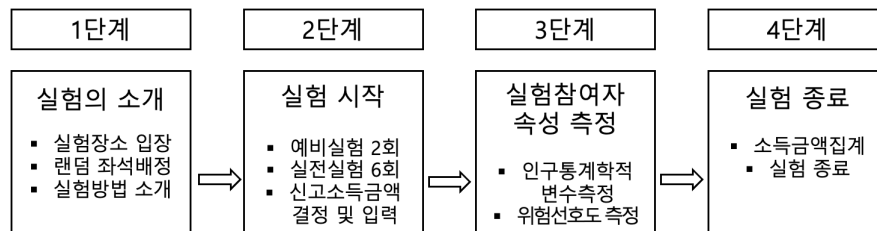
실험방법은 실험참여자가 직면한 제도나 유인을 조작할 수 있어서 주요 관심 변수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실험방법이 제공하는 유연성(flexibility)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결정에서 예상되는 유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Alm and Jacobson 2007). 실험방법은 경제적 의사결정 관련된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행동 회계 연구(behavioral accounting research)에서는 특히 납세자의 조세순응 연구에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고려되어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lm 1991).

본 연구의 실험은 세무신고 상황을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을 실험 참여자로 한정하여 자발적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의 선정을 위해 4년제 대학의 회계 전공자 중 세무회계 과목을 수강한 학생을 실험참여자로 하였다.⁵⁾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납세자의 조세순응(세무신고 의사결정)을 측정하기 위한 신고소득률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 및 혜택 유형(세무 조사면제, 세액공제)으로 집단 간 설계로 구성하였다. 본 실험은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한 경우 집단별로 설계된 혜택이 제공되며, 설계된 가상의 세무신고 상황에 따라 실험참여자들이 세무신고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참여자는 예비 실험 2회, 실전 실험 6회의 세무신고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와 세무신고 행태를 분석하여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혜택 제공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험 절차



5) 이러한 실험대상은 다수의 세무 관련 실험연구(Wartick et al. 1999 ; Boylan and Sprinkle 2001 ; Alm and McKee 2006 ; 배수진 2017)에서도 이용됐다.

실험연구를 위한 1단계에서는 실험참여자가 사전에 공지한 장소(대학 강의실)에 입장하여 좌석 번호표를 추첨하여 해당 좌석에 앉도록 하였으며, 실험상황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 실험상황에서 참여자는 각자를 가상의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대표로 가정하며, 각 기간의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⁶⁾ 2단계에서는 실험참여자가 실제 실험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실험참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2회의 예비 실험을 수행한 후 6회의 실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단계에서 모든 실험참여자가 볼 수 있도록 해당 기간의 실제 소득금액을 제시하고, 실험참여자가 세무서에 신고할 신고 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외부감사의 실시 여부와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혜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우선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귀하의 법인은 법정감사 대상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외부감사 실시로 인해 감사 시간과 감사 비용이 소요됩니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인 세액공제와 세무조사 면제 혜택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정보를 고려하여 각 참여자는 각 실험에서 세무서에 신고할 신고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금액에 법인세율(20%)을 곱한 금액인 납부세액을 신고양식에 기록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하였다.⁷⁾ 이러한 실험 과정은 8회의 전체 실험에서 동일하게 반복된다. 이후 3단계에서는 인구 통계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위험 선호태도 등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6회의 실전 실험의 결과를 정리하고 모든 실험 절차를 종료한다.

2. 변수 측정

종속변수인 조세순응은 실험참여자의 신고 소득률($=\text{신고소득}/\text{실제 소득} \times 100$)을 측정하였다. 실제 소득은 8회(예비 실험 2회, 실전 실험 6회)의 실험 수행 시 10억 원에서 시작하여 17억 원까지 1억 원 단위로 조정하여 총 8개의 실제 소득금액을 마련하고, 이를 임의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와 혜택 제공(세액공제, 세무조사 면제)에 따라 조정된 4가지의 상황에서, 각 참여자는 제시된 실제 소득 대비 신고할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결정한 금액에 법인세율(20%)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신고양식에 기록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는 자발적 회계감사 실시 여부와 혜택 유형으로 하였다. 자발적 회계감사 실시는 실험상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면 1, 실시하지 않음은 0으로 부여한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또한 혜택 유형은 세무조사 면제와 세액공제로 설계되어 세무조사가 면제될 경우 1, 세

6) 세무신고 경험이 없는 실험참여자가 실제 소득 대비 신고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년도 신고상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7) 실험에서는 참여자가 “소득세신고서” 양식에 신고 소득금액과 20%의 세율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의 보조요원이 이를 수거하도록 하였다.

액공제를 받을 경우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세무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된 성별, 연령, 위험선호 태도를 측정하여 통제하였다. 성별은 남자면 1, 여자면 0인 더미변수로 측정하였으며, 연령은 자연로그값을 이용하였다. 위험선호 태도는 Murnighan et al.(1988)이 제시한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확실한 투자안과 상대적으로 불확실한 투자안을 제시하고 확실한 투자안을 선택한 개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위험선호형과 위험회피형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3. 자료 수집

실험참가자는 40명으로 각각 6회의 실험을 수행하여 240개의 표본(40명×6회)이 수집되었다. 이 중 부적절한 응답으로 적절성 평가에서 제외된 표본 5개와 극단적으로 낮은 소득을 신고한 표본 4개를 제거하여 최종표본은 231개이다. 전체표본 평균 연령은 24.5세였으며, 성별은 남성이 124명(46.32%)으로 여성 107명(43.68%)보다 약간 높았다. 위험선호 태도는 위험회피형이 210명(90.91%), 위험추구형이 21명(9.09%)으로 위험회피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V.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분석에 앞서, <표 2>와 같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고소득률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한 집단은 평균 82.66%로 실시하지 않은 집단의 80.01%에 비해 신고소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의 80.37%보다 세무조사 면제의 혜택을 제공하면 82.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85.66%로 높은 신고소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술 통계량

자발적 외부감사	혜택 제공	N	Mean ^{주1)}	S.D	Total	
					Mean	S.D
실시	없음	39	80.37%	0.139	82.66%	0.124
	세무조사 면제	26	82.15%	0.132		
	세액공제	43	85.66%	0.120		
실시 안 함	없음	41	77.98%	0.127	80.01%	0.130
	세무조사 면제	40	81.32%	0.123		
	세액공제	42	80.76%	0.132		

주1) 신고소득률(%)=신고소득/실제 소득×100

2. 실증분석 결과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세무조사 면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될 때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ANCOVA, analysis of covarianc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인 성별과 위험선호 태도는 공변량(covariate)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 여부는 신고소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F=9.875$, $\text{sig.}=0.00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 외부감사의 실시는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에서도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한 경우(Mean=82.66%)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Mean=80.01%)보다 높은 신고소득률을 보고하였다. 반면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세무조사 면제(Mean=82.15%), 세액공제(Mean=85.66%))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Mean=80.37%)에 비해 신고소득률이 높았으며,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즉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9.123$, $\text{sig.}=0.003$). 이는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조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로서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대한 혜택 제공이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3〉 ANCOVA 분석 결과

	제Ⅲ유형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수정된 모형	0.328	5	0.064	3.861	0.002
자발적외부감사(A)	0.162	1	0.162	9.873	0.002
혜택 제공(B)	0.026	1	0.026	1.587	0.222
(A)*(B)	0.156	1	0.156	9.123	0.003
성별	0.003	1	0.003	0.173	0.667
위험선호 태도	0.008	1	0.008	0.408	0.534
오차	8.523	228	0.015		

주1) $R^2=0.047$ (Adj $R^2=0.036$)

다음으로 혜택 제공 유형에 대한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세액 공제 혜택이 부여된 경우의 평균 신고소득률은 85.66%로 세무조사 면제 혜택 부여의 평균 82.1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세무조사 면제보다 더 선호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법정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은 대부분 소규모기업인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업은 외부감사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으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금전적 혜택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혜택 제공 유형에 따른 차이 검정 분석 결과

	평균	t	유의확률
세무조사 면제	82.15%	2.072	0.039
세액공제	85.66%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자발적 외부감사 실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조세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조세는 국가의 재원을 충당하는 일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현재 개인 납세자와 일부 소규모법인납세자(부동

산임대업이 주업인 경우 등)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인사업자 중 소득탈루율이 높은 100억 미만 법인에 대한 조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법정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정부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순응을 높이는 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자발적 외부감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과 2) 자발적 외부감사를 촉진하기 위한 혜택(세무신고 면제, 세액공제) 제공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검증함으로써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면 조세순응에 순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자발적 외부감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신고소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발적 외부감사의 실시는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발적 외부감사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혜택(세무조사 면제, 세액공제)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면 신고소득률을 제고하는 등 조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혜택의 유형 중에서는 세무조사 면제보다는 세액공제 혜택이 조세순응(신고소득률)이 높게 나타났다. 세액공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순응 유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발적 외부감사에 대한 촉진전략으로 각종 혜택이 제공되면 조세순응을 유인하는 등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자발적 외부감사를 증가시켜 사회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복지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세무상황과 관련 변수들이 현실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실험방법을 통한 일반적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조세라는 특성과 심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방법을 통한 연구의 경우에도 사회통계적 의미는 상당하다.

참고문헌

- 권일환. 2009.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자존중(Tax Mileage)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9권 제1집 : 291-322.
- 권재열. 1988. “회계감사와 회계감사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연세법학연구.
- 박정우 · 최원석 · 이영한 · 전병욱. 2010. “외부감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권 제1호 : 423-459.
- 박종일 · 전규안 · 남혜정. 2011. “강제 및 자율 외부감사가 발생액 및 실제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 처음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0권 제6호 : 1481-1518.
- 배수진. 2017. “성실납세자 혜택은 조세순응을 유도 하는가 : 조건별 보상여부와 혜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2권 제4호 : 141-175.
- 오광욱 · 정석우 · 차승민. 2011. “외부감사가 부채조달비용에 미친 효과 -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38집 : 143-172.
- 장금주 · 강민정 · 김상순. 2014. “법정 외부감사에서 배제된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이익조정”. 회계저널 제23권 제5호 : 237-277.
- 최보람 · 윤성만. 2017. “자발적 감사와 감사기준 완화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조세연구 제17권 제1집 : 7-30.
- 현진권 · 박창균. 2001. “세무조사의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01-03. 한국조세연구원.
- 홍기용 · 김갑순 · 이선표 · 박훈. 2013. “자발적 외부회계감사 확대와 지하경제 양성화”. 회계 · 세무와 감사 연구 제55권 제2호 : 451-489.
- Allingham, M., and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4) : 323-338.
- Alm, J. 1991. “On the experimental analysis of taxpayer reporting”. *The Accounting Review* 66 : 577-593.
- Alm, J., and S. Jacobson. 2007. “Using laboratory experiments in public economics”. Working paper.
- Almm J., and M. Mckee. 2006. “Audit certainty, audit productivity, and taxpayer compliance”. *National Tax Journal* 59(4) : 801-816.
-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Committee on Basic Auditing Concepts. 1973.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Concepts”.
- Andreoni, J., B. Erard., and J., Feinstein. 1998.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2) : 818-860.
- Boylan, S. J., and G. B. Sprinkle. 2001. “Experimental evidence on the relation between tax

- rates and compliance : The effect of earned vs. endowed income”.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23(1) : 75–90.
- Falkinger, J., and H. Walter. 1991. “Reward versus penalties : On a new policy against tax evasion”. *Public Finance Quarterly* 19(1) : 67–79.
- Feld, L. P., B. S. Frey, and B. Torgler. 2006. “Rewarding honest taxpayers? Evidence on the impact of rewards from field experiments”. Working paper.
- Fernando, G.D., R. J. Elder, and A. M. Abdel–Meguid. 2008. “Audit quality attributes, client size and cost of capital”. Working paper. Syracuse University.
- Murnighanm J., A. Roth., and F. Schoumaker. 1998. “Risk aversion in bargaining :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Risk and Uncertainty* 1(March) : 101–124.
- Wallace, W.A. 2004. “The Economic Role of the Audit in Free and Regulated Markets : A Look Back and a Look Forward”. *Research in Accounting Regulation* 17 : 267–298.
- Wartick, M. L., S. A. Madeo, and C. C Vines. 1999. “REward dominance in tax–reporting experiments : The role of context”.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n Association* 21(1) : 20–31.
- Wenzel, M. 2003. “Tax compliance and the psychology of justice : Mapping the field. In taxing Democracy”. *Understanding Tax Avidance and Evasion*, edited by V. Braithwaite. Aldershot : Ashgate publishing Limited 41–70.
- Wenzel, M. 2004. “An analysis of norm processes in tax complia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5(2) : 213–228.

Voluntary External Audit and Tax Compliance^{*}

Jin Joo Moon^{**} · Ki Yong Hong^{***}

〈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 how voluntary external audits of corporations that are not subject to statutory external audits affect tax compliance, and determine whether voluntary external audits are compensated and what kind of effects they have on tax compliance when benefits (tax deductions, tax audit exclusion, etc.) are given. I want to see if there is a difference.

For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experimental methods, and in order to select subjects who could understand the tax reporting situation, experimental participants were students who had taken a tax accounting course among accounting majors at a four-year universit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eported income rate, which measures taxpayers' tax compliance (tax reporting decision-making),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whether voluntary external audit was conducted and the type of benefit (tax exemption from tax audit, tax credit).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a between-group design. The experiment involves conducting tax returns in two preliminary experiments and six actual experiment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implementation of voluntary external audits and tax reporting behavior are analyzed to determine the policy effect on providing benefits from voluntary external audits. Tes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ported income rate was higher when voluntary external audit was conducted than when it was not conducted, confirming that voluntary external audit induces tax compliance. In addition, providing benefits for voluntary external audits has been shown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so if voluntary external audits are conducted, providing the benefits can contribute to inducing tax compliance. Among the types of benefits for voluntary external audit, tax credit benefits have a higher reported income rate than tax audit exemption, so providing tax credit benefit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ducing tax compli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hat providing benefits for voluntary external audit can be significant as a policy to encourage tax compliance.

〈Key words〉 Statutory audit, tax compliance, accounting, taxation, tax law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Incheon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in 2021.

** Assistant Professor,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8rina@bufs.ac.kr, First Author

***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ong@tax.kr, Corresponding Author